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금감원 저축은행 PF대출 부실화 대책 발표

- 정부는 최근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과 건설사 구조조정 등으로 저축은행 PF대출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어 선제적 대책 및 감독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함.
 - 최근 PF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2009년 12월말 기준 PF대출을 보유한 91개 저축은행의 PF대출 12.5조원(714개 사업장)에 대해 사업성을 평가함.
 - 금액기준 정상이 26.5%, 보통이 42.2%, 악화우려가 31.3%로 나타났으며, 사업장기준으로는 정상이 24.8%, 보통이 34.7%, 악화우려가 40.5%로 나타남.
 - 금융위기 이후 정상·보통 사업장이 보통·악화우려로 전환되는 등 사업성이 크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됨.

- PF대출을 포함한 저축은행의 건전경영 유도를 위한 대책으로는 PF대출의 분리 매각, 자구노력에 의한 정상화, 시장에 의한 M&A 등 단계적 구조조정 방안이 포함됨.
 - 6월말까지 저축은행의 부실우려 PF대출 총 3.8조원을 구조조정기금 및 캠프코를 통해 신속히 매입함으로써 시장의 불안심리를 해소할 방침임.
 - PF대출을 캠프코에 매각하는 저축은행에 대해 증자, 자산매각 등 지원에 상응하는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촉구하여 자체 정상화를 유도하기로 함.
 - 부실이 우려되는 저축은행의 경우 제3자 매각 등 시장을 통해 정상화를 유도하되, 정상화가 어려운 저축은행은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지속 정리할 방침임.

- 저축은행의 부실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PF대출 사후관리 등에 대한 감독의 강화 방안도 발표함.
 - PF대출 상시감시 시스템 구축, 자율 워크아웃제도 개선 등 PF대출의 사후관리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함.
 - 2010년 4월에 발표한 “서민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방안”을 착실히 이행하여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경영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임.
 - 저축은행 감독·검사방식을 개선하고 금감원의 관련 조직·인력을 보강하는 등 감독역량을 대폭 확충할 계획임.

(저축은행 PF대출 문제에 대한 대책 및 감독강화 방안, 금융위 중소기업금융과 등, 6/25)